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2

2025 FEBRUARY

VOL. 98

국제사회 속에 우뚝서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재정정보원

Theme Story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이슈들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들이 오고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재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짚어봅니다.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서울시티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2288-6200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센터 | 02-6908-8559 **기획·디자인·인쇄** ㈜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재정 INSIGHT

04 통계로 보는 FIS 인사이트
통계로 보는 외교·통상 부문 예산

08 이달의 재정 VOCA
세계잉여금

10 재정칼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중국 2025년 경제통상 정책의 양대 도전:
수요충격 대응과 미국의 공격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재정 NOW

20 숫자로 보는 재정동향
2024년 11월 기준 재정동향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일반·특별회계) 마감

26 해외재정동향
주요국 및 국제기구 재정동향

34 재정 캘린더

재정 NAVIGATION

36 예술사 속 재정경제 이야기
나라는 누가 지켜나가는가?

42 현실 속 재정제도 이야기
시장실패의 교정수단들:
조직과 계약의 거버넌스

48 재정이 MONEY
신흥안보 위협과
첨단 바이오 방위산업 전망

52 플랫폼이 된 도시
조선통신사의 발걸음이 닿은 도시들

58 이달의 재정경제 도서

FIS 재정

60 FIS 재정 알리미
재정정보공개플랫폼
열린재정

62 재정원 소식

64 애독자 코너











통계로 보는

통계로 보는 외교·통상 부문 예산

글 • **우수연** 재정정보분석센터 연구원

2025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세계 경제 위험 요인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진단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이민 제한 정책 등을 추진하며, 세계 경제와 무역의 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신(新) 대외경제 전략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라는 회의체를 운영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월 4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되었으나 향후 재확대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통일·외교 분야 중 외교·통상 부문의 예산 추이를 분석하여 대내외 변화에 따른 외교·통상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5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763억 원 증가(2.3% 증가)한 7.7조 원이 편성되었다. 외교·통일 분야는 외교·통상과 통일의 총 2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외교·통상 부문 예산이 작년 대비 2,423억 원 증가, 통일 부문은 660억 원 감소했다.

| 2025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B)	증 감	
				(B-A)	%
외교·통일		75,455	77,218	1,763	2.3
	외교·통상	64,140	66,563	2,423	3.8
	통일	11,315	10,654	△660	△5.8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교·통일 분야의 부문별 지출 추이에 따르면, 5년간 외교·통상 부문의 예산은 3조 4,256억 원에서 6조 4,14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통일 부문 예산은 2,681억 원에서 1조 65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외교·통상 부문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같은 기간 통일 부문과의 비중 차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0~2025년 외교·통일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

(단위: 억 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예산	2025 예산
외교·통일		36,937	42,439	45,230	50,285	75,455	77,218
	외교·통상	34,256	39,848	42,134	47,718	64,140	66,563
		(92.7)	(93.9)	(93.2)	(94.9)	(85.0)	(86.2)
	통일	2,681	2,590	3,096	2,566	11,315	10,654
		(7.3)	(6.1)	(6.8)	(5.1)	(15.0)	(13.8)

주 1) 괄호 내 수치는 외교·통일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임
2) 2020~2023년은 결산 기준, 2024~2025년은 본예산 기준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외교·통상 부문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과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지속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2019년(3.1조 원) 대비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경제협력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청년 해외 진출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을 정비하여 다부처 협업 ODA를 확대하고, 유망기업과 ODA를 연계하여 질적 내실화를 다질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제고한다. 2025 APEC의장국 운영 사업은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하는 제32차 정상회의 및 관련 행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 25억 원에서 2025년 1,008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정상회의 주간 동안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부문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도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억 원, %)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B)	증 감 (B-A)
2025 APEC 의장국 운영	-	24.6	1,008.3	983.7

주: 2023년은 결산, 2024~2025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외교·통일 분야 내 ODA 사업은 외교·통상 부문에서만 수행되는데, 이를 세부 사업 단위로 집계하면,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02억 원 증가한 5조 458억 원이 편성되었다. 외교·통일 분야 전체에서 ODA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3%다.

외교·통상 부문 내 ODA 사업은 기획재정부, 외교부의 소관으로 구성되며, 일반회계 및 기금 내 국제기구분담금, 다자관계 협력, 국제개발협력, 대외경제협력지원, 기금운영비의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ODA 추진체계는 크게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협력으로 나뉘며, 양자 간 협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다. 무상원조는 외교부 주관하에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기재부의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의 경우에는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점협력국 제도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일부 국가에 집중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은 27개국으로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목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중장기 ODA 지원 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외교·통상 부문의 주요 ODA 사업에는 아시아차관(융자) 8,702억 원,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 7,752억 원, 인도적 지원이 6,775억 원 등이 있다. 아시아차관(융자)의 경우, 장기저리의 양허성[1] 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2.4% 증가했다.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은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또는 현지 기업이 추진하는 개발 목적 사업 지원을 통한 개도국 민간부문 육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며,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 한편, 인도적지원 사업의 경우 난민 등 만성적 재난, 자연 재난 등 긴급 재난 지원,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 신해외긴급구호 및 선진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8.5% 감소한 수준이다.

1)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

| 외교·통상 부문 주요 세부사업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24 예산	2025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아시아차관(융자)(ODA)	8,499	8,702	2.4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6,089	7,752	27.3
인도적지원(ODA)	7,401	6,775	-8.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3,016	3,833	27.1
아프리카차관(융자)(ODA)	4,170	3,805	-8.8
재외공관 인건비	2,842	2,992	5.3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2,087	2,244	7.5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ODA)	2,124	2,168	2.1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878	1,790	-4.7

주: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달의 재정 VOCA

세계잉여금

2월은 지난해의 나라살림을 정리한 1차 결과를 재정당국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달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지난해 거두어들인 금액(=총세입)이 지출하여 내보낸 금액(=총세출)보다 얼마나 큰지 구한 뒤, 여기서 올해로 이월하는 부분을 제한 금액을 세계잉여금이라 부릅니다.(「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 기금수입과 지출은 중앙정부 통합재정의 일부이지만, 세계잉여금 산정 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는?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사용처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쓰게 됩니다. 이는 한 해 국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몫으로 정하고 있지만 회계연도 종료 후에야 확정된 국세 수입 금액을 알 수 있는 데에 기인합니다. 다음으로는 교부금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30%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고, 공적자금 상환 후 잔액의 30% 이상은 국채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합니다. 이후에도 남은 금액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다음 연도 세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잉여금 확정 및 규모

한 해의 나라살림은 다음 연도 2월 10일(출납정리기한)까지 회계장부(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합니다. 이는 정부의 1년간의 출납 사무를 완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가 확정되어 집니다. 올해 나라살림 마감 결과 2024년 세계잉여금 규모는 2.0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4조 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1.6조 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 처리될 예정입니다.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 − 총세출) − 다음 연도 이월액

세계잉여금의 처리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예정
  ①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 정산
  ②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③ 채무상환
  ④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부교수

트럼프 2기 출범 후 국경 문제 해결 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우회 수출 차단 위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두 가지 통상정책 시행
특히 기술보호 정책의 강화로 대(對)중국 수출통제와 중국의 대(對)미 투자 규제 확대 예상
우리 기업은 특히 반도체의 중국 판매에 큰 어려움 겪게 될 것으로 전망

-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 25%, 중국 10% 관세 부과
- 중국 겨냥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 시행,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 대(對)중국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 기업 수출 차단 예상



관세 중심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현황과 평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힘써왔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우방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미국의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통상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 조치를 핵심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며 미국이 원하는 것을 상대국으로부터 받아내는 협상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후 실현되고 있는 첫 번째 조치는 불법 이민과 마약 등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및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조치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의거하여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로 인한 미국의 공중보건 위기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관세 조치를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여 미국인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조치를 실제로 부과한 것인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 단속 강화 조치를 약속하면서 한 달간의 유예를 받아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와 희토류 25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재발하게 된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후 두 번째 관세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은 과도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때문에 미국의 국가안보가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브라질 등 9개국에 허용했던 무관세 할당(TRQ) 및 무관세 쿼터(quota)에 대하여 미국은 당초 철강 관세 도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국내 철강 생산 가동률 80%라는 목표 달성을 저해했다고 판단, 이번 행정부에서는 이들 면제 조치를 모두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포고문과 참고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이 미국 시장으로의 우회 진출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 면제를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철강을 수출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조치는 결국 중국의 대(對)미 철강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국으로 수출중인 철강 수출국 중 중국은 3%(10위 수준)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對)미 최대 철강 수출국은 금번 결정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등인 것으로 집계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명분은 중국의 철강 공급과잉 문제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철강 수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 고율 관세를 대(對)미 철강 수출국에 일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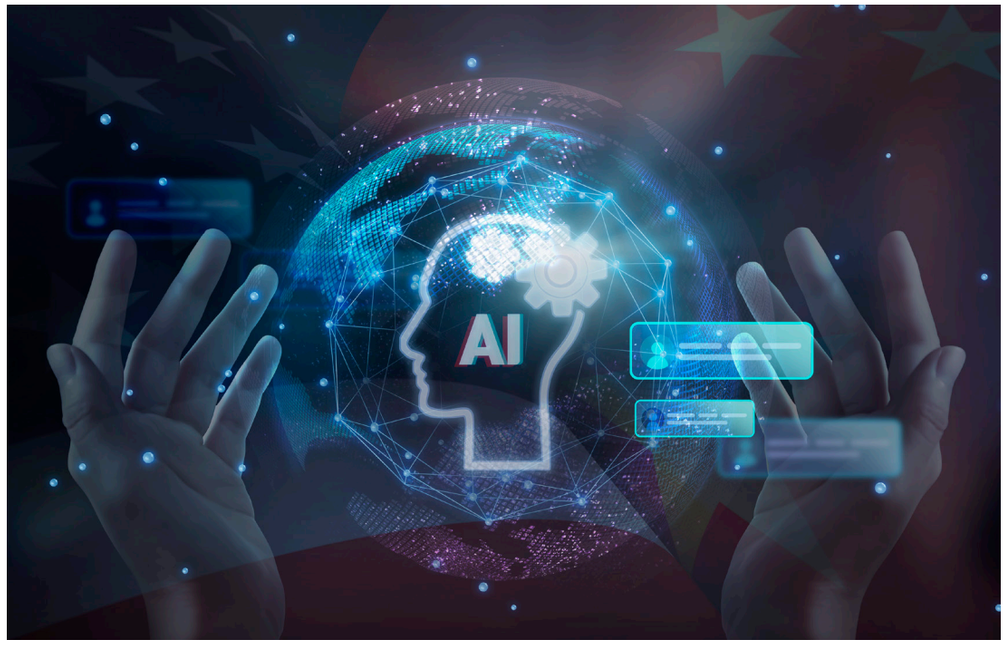
한편, 동 조치의 3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는 미국과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는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대안적 수단(satisfactory alternative means)'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놓고 미국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철강 관세 부과 위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에 따라 동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철강 수출국들은 트럼프 1기 당시와 같이 미국에 공동 대응을 하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대우를 받기 위해 상호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를 이용한 협상 전략에 무역상대국들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 중인 상황이며,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 하에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준비 중이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조치도 어떠한 형태로 가시화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자동차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안보 침해를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를 부과하고자 한 바 있으나, EU 및 일본과의 추가 협상 결과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치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추가 연장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이 자동차에 대한 제232조 조치의 적용 유예 결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중 중국에 대한 10% 보편관세 부과는 실현되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각각의 조치에 대하여 한 달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은 상태다.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없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고율의 관세 조치 앞에서 최소한의 국익을 지켜가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 시장만큼 유사한 규모의 거대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EU의 경우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조치에 대하여 정면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투자를 원하는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협상 전략이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對)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전략적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 등의 강화를 통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수출통제는 독자적 통제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통제 대상인 통신기술 및 장비 분야에서 우월한 기술력과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자화된 수출통제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역량 증강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첨단기술 이전을



강력하게 차단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전략 산업으로 중시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AI 반도체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를 확대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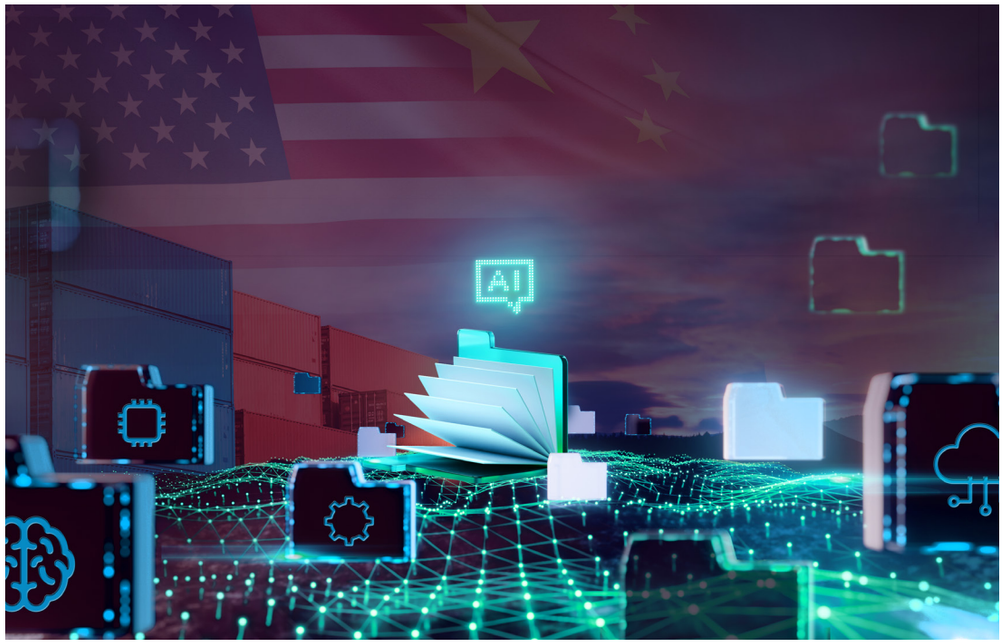
수출통제 조치 외에도 중국의 기술 부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의 대(對)미 투자에 대한 규제 조치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이미 첨단기술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의 증대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 중국의 대(對)미 투자를 견제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의 대(對)미 투자를 통해 미국 기술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이 제정되어 2020년 2월 발효되었는데, 동 법은 외국인의 대(對)미 투자 신고 의무화, 심사대상 확대, '미국 외국인투자 심사 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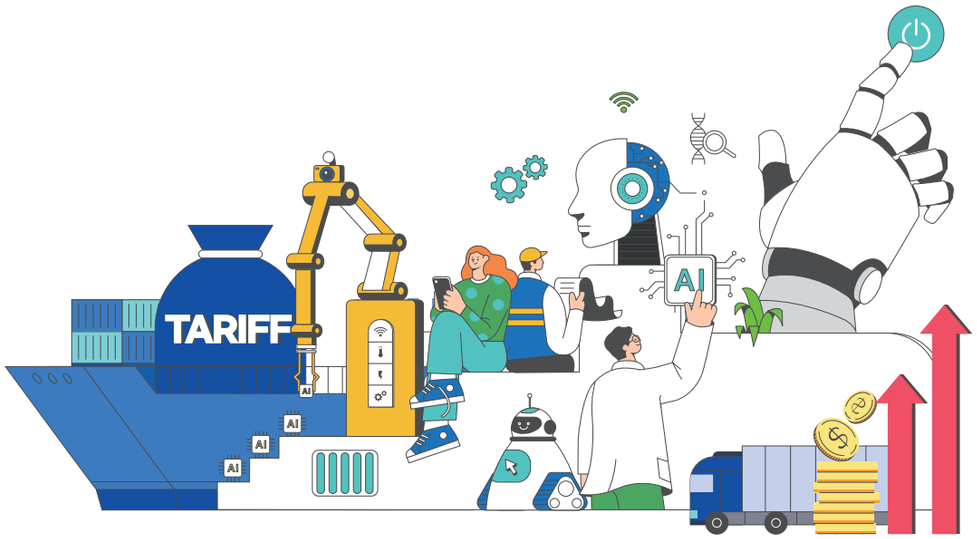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첨단기술 분야뿐 아니라 에너지, 통신, 천연자원, 기타 전략적 국가자산 등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중국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캠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Project 2025'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이전과 지재권 확보를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투자 및 인수하도록 지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 정부조달 계약 금지,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모든 투자 금지, 미국 연기금의 중국 주식 투자 금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미국 내 투자(inbound investment)를 규제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outbound investment)에 대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 부상을 더욱 강력하게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적성국 및 우려대상국을 비롯하여 동맹 및 우방국들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고려한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출통제 등 미국의 기술보호 정책의 강화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 시장은 우리 기업이 판매하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물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 않으며,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HBM의 미래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으로의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는 중국의 반도체 자체 생산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 현재는 중국이 개발 및 상용화를 추구하고 있는 HBM 기술력이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력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이지만, 상용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수출규제를 역외적용하는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의 적용은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판매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HBM 및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FDPR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게 될 경우 우리 기업은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FDPR 면제 적용을 받게 되는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판매는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세계 HBM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수출통제 조치 강화의 영향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AI 기술 우위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대응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이 국내외적 정책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통상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이 핵심 산업분야로 간주하고 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우리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상 레버리지를 더 많이 발굴하여 미국 정부와의 상호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2025년 경제통상 정책의 양대 도전:
수요충격 대응과 미국의 공격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와 재정투입 문제로 절제된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 및 과학기술부문 지속적 투자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의 적대적 관세 정책에 섬세하게 대응하며 위기 돌파 노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2025년 1월 기준), 실업률은 5.1%(2024년 12월)
- 중국 재정건전성 지표인 정부순적자, 2024년 이후 -7.6 → -7.8 → -7.9 지속적 하락 전망
- 2025년 2월, 미국의 10% 추가관세에 대응하여 섬세한 광물자원 수출통제 조치 및 미국산 자원과 수출품 등에 10% 추가관세 부과



수요충격에 빠진 중국경제

2023년 봄 이후 중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5.3 → 4.7 → 4.6과 같이 낮아졌으나 4분기에 극적으로 5.4%로 반등하여 전체 성장률은 5.0%를 기록했다. 이렇게 연초의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그 내용은 별로 좋지 않다. 소비와 민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정부투자로 가까스로 투자율을 지탱하고 있고 수출만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가와 실업률을 관찰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공급충격에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이 높은 전형적인 수요충격 상태로 전환됐다. 단, 중국의 현재 상황을 물가 하락(deflation)이라 부르긴 어렵고 물가未상승(disinflation) 상태라고 봐야 한다. 2025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였다. 실업률의 경우, 재학생을 통계에서 제외하는 무리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에 5.1%를 기록하여 올해 목표치(5%)를 상회했다.

충격의 원인과 절제된 대응

이러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역(逆)자산효과다. 중국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2023년 10월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은 부동산 구조조정 정책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2기(2017년) 들어 부동산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조해 왔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했고, 부채가 많은 부동산 기업을 선별하여 대출을 규제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해 2023년 4월에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구축했다.

현재 중국 거시경제의 양상은 '예상 못 한 침체'가 아니라 '예상보다 심각한 침체'에 가깝다. 구조조정의 고통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은 채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다. 2024년 11월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미친 소와 느린 소'를 언급했다. 무분별한 경기부양으로 경기를 과열시키는 미친 소가 아니라 느리더라도 착실한 소와 같은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2023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선립후파(先立後破)가 강조됐다. '내수확대 전략(先立)을 공급측 구조개혁(後破)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킨다'는 뜻이다. 채무불이행을 당한 부동산 기업 헝다(恒大)의 사례를 봐도, 구제금융을 투입하여 회생시키기보다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약속된 물량은 완공시켜 분양하는 연착륙 방식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2024년 3월 전인대(全人大)에서도, 소모성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출은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와 같은 논리로 재난지원금 지출을 최소화했었다.

2025년 펼쳐질 여러 가지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들은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난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운용 목표를 내수확대로 설정하고 기존의 상용구인 '적극적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약속했다. 통화정책도 '온건한'이라는 예년의 표현보다 더 강한 '적절히 확장적인' 기조가 언급됐다. 이러한 수식어로 보아 더 강한 경기부양 정책이 3월 전인대에서 구체적인 지표로 발표될 것이다. 한편 수정창신(守正創新)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발표됐는데 이는 올바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새로운 혁신을 하자는 뜻이다. '적극성'과 '확장성'을 제어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2024년에는 계획에 없던 인상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시행됐었다. 11월에 발표된 10조 위안의 재정투입이 그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상대적 규모를 보면 GDP 대비 7.9%가량으로 2008년 당시 12.5%보다 적다. 내용상으로도 직접적인 재정지출이라기 보다는 '대차대조표 개선형'에 가깝다. '지방정부 부채한도 6조 위안 증가', '지방부채 치환용 채권 향후 5년간 8천억 위안 발행'이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중국 정부의 두 가지 고민을 보여준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건전화가 시급하다. 재정지출의 80%는 지방에서 이뤄지지만 토지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재정은 좋지 않다. 이대로라면 지방부채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

표
중국 재정건전성 추이
(% of GDP, 2024년은 추산, 그 후는 전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정부純적자	-6.1	-9.7	-6.0	-7.5	-7.0	-7.4	*-7.6*	*-7.8*	*-7.9*	*-8.1*	*-8.2*
수입	28.1	25.7	26.6	26.6	26.6	26.3	*26.4*	*26.6*	*26.8*	*27.0*	*27.0*
토지판매수입	2.9	2.5	2.3	1.1	0.9	0.8	*0.8*	*0.8*	*0.8*	*0.8*	*0.8*
지출	34.2	35.4	32.7	33.5	33.7	33.7	*34.0*	*34.4*	*34.7*	*35.0*	*35.3*
부채	38.5	45.4	46.9	50.7	56.3	60.5	*63.7*	*67.1*	*70.9*	*74.9*	*79.1*
구조적 수지	-5.8	-8.6	-5.7	-6.8	-6.5	-7.1	*-7.4*	*-7.8*	*-7.9*	*-8.1*	*-8.2*

자료: IMF(Aug. 2024, Country Report)

둘째, 재정투입 용처가 마땅치 않다. 2008년에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되지 않았고 도시화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기에 부동산과 교통 인프라 건설에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다. 2024년의 중국은 그동안의 꾸준한 투자로 대도시의 인프라는 거의 완성됐다. 이제 지방 도시나 농촌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수요가 분명치 않은 곳에 투자했다가는 고스트 타운(鬼城)이라 불리는 공실을 양산하는 수가 있다. 미친 소가 날뛰도록 둘 수 없다는 인민일보의 표현은 이런 고민을 배경으로 한다. 결국 중국은 각 지방이 알아서 정교하고 절제된 투자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 궁극적 승리를 위한 기획

2023년 가을부터 등장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이란 용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 생산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으로 갑자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겠다는 평범한 언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거시경제가 침체한 와중에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산업 및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한다. 90년대 일본은 거시경제 건전화에만 매달려 있다가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에서 탈락했었는데 그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의 때맞춤 기술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2.0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적대적 관세 정책은 중국 경제성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2018년에 비해 중국은 좀 더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줄었다.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017년 21.6%에서 2024년 13.5%로 8.1%p 낮아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도 같은 기간 18.9%에서 14.6%로 4.3%p 낮아졌다. 즉 미국 관세부과의 충격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충격에 대한 대응도 트럼프 1기에 비해 섬세하다. 중국은 2025년 2월 5일 미국의 10% 추가관세에 대해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매우 정교하게 선정된 이러한 통제 리스트는 그동안 광물자원법과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준비돼 온 것으로 보인다. 2월 11일에는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를, 원유·농기계·대형차·트럭 등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도 제너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미국 기업의 이름이 속속들이 추가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조업하는 미국 기업들–구글, 애플, 테슬라 등–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다는 뉴스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그야말로 대응(reaction)이다. 그 수준도 미국이 가하는 만큼만 받아치는 일종의 텃포탯(tit for tat)에 가깝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아파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농산물에 대한 추가관세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당선인 시절 호언하던 60% 관세를 매기지 않은 만큼, 중국도 공격의 패를 아껴둔 것이다.

결론: 준비된 대응의 한계

이상과 같이 중국은 비교적 차분한 거시경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더 적극적이긴 하지만 2009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 경기부양과 동시에 거품을 빼는 연착륙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거품이 더 커지면서 극적으로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조조정의 과정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즉 부동산 재고 소진이 언제 종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섣부른 전망을 하기 힘들다. 또한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보편적 목표를 거시경제 불황의 와중에 추진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칫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고 거품을 오히려 키우는 작용을 할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적대적 정책은 근본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예상했던 60%보다 낮은 공격이 왔다고 안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비했다고 자신할 수도 없다. 즉 준비된 대응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격을 감내할 만큼 중국의 내수경제가 튼튼하지 않다. 이 모든 어려움을 딥시크와 같은 극적인 기술적·산업적 성공으로 돌파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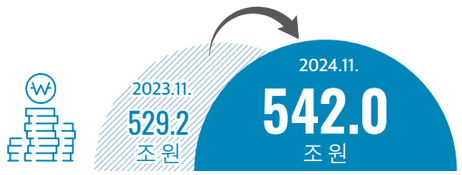
재정동향 2024년 11월 기준

'24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
(현 재정동향 수치는 월간 나라재정 2025년 1월호와 대부분 동일)

총수입·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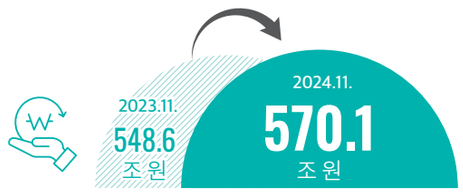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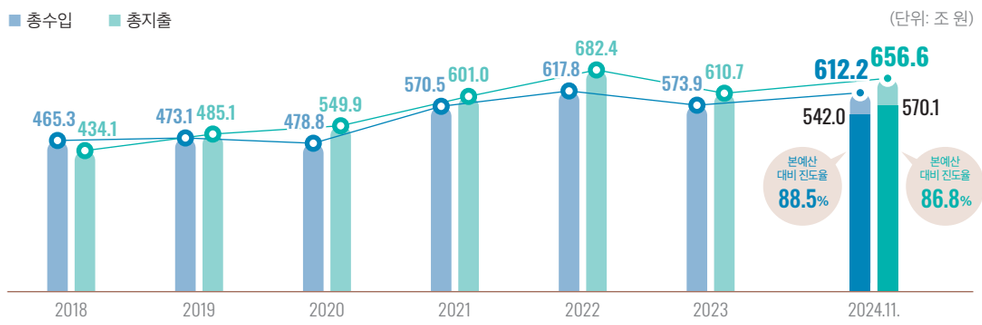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12.8**조 원



총지출

전년 동기 대비 **+21.5**조 원





주: 2023년까지는 결산, 2024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28.2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8.7**조 원(적자 확대)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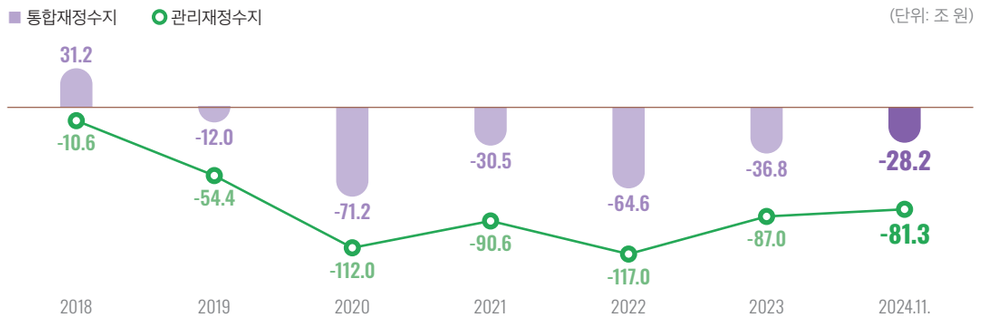
81.3조 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6.4**조 원(적자 확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3.1조 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3)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주: 2023년까지는 결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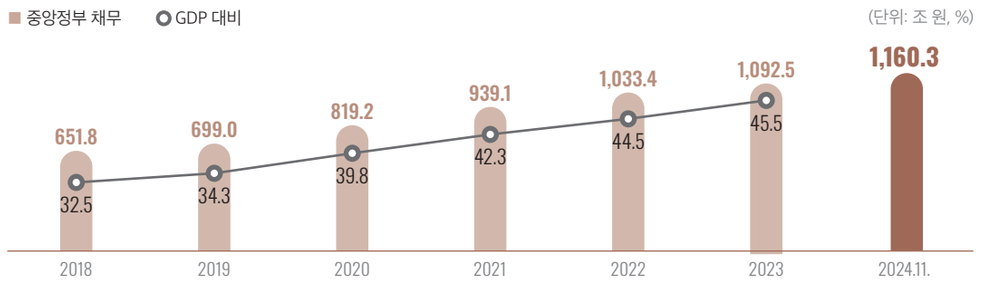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전월 대비 **+4.1**조 원

1,160.3
조 원

전년 말 대비 **+67.8**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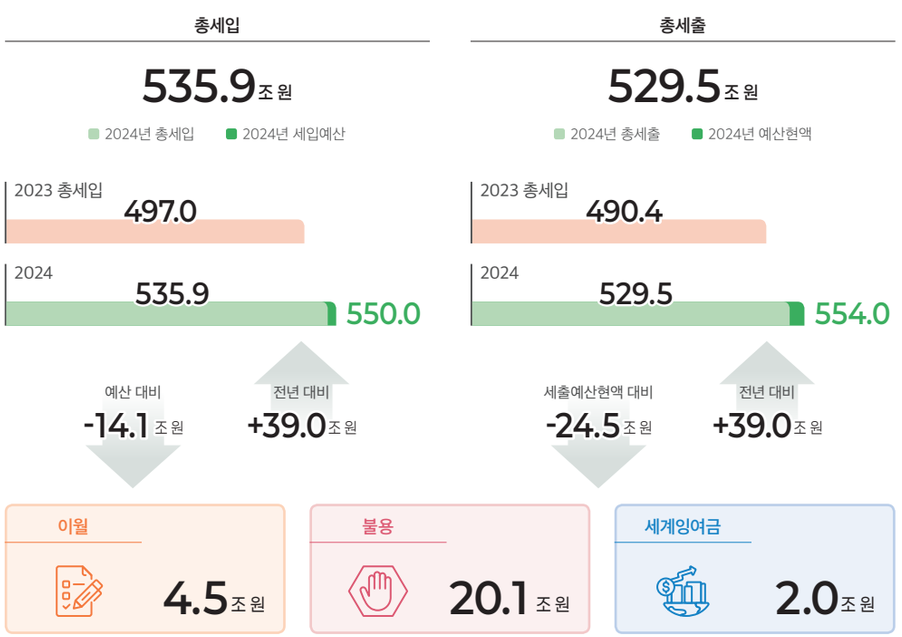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5.1.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일반·특별회계)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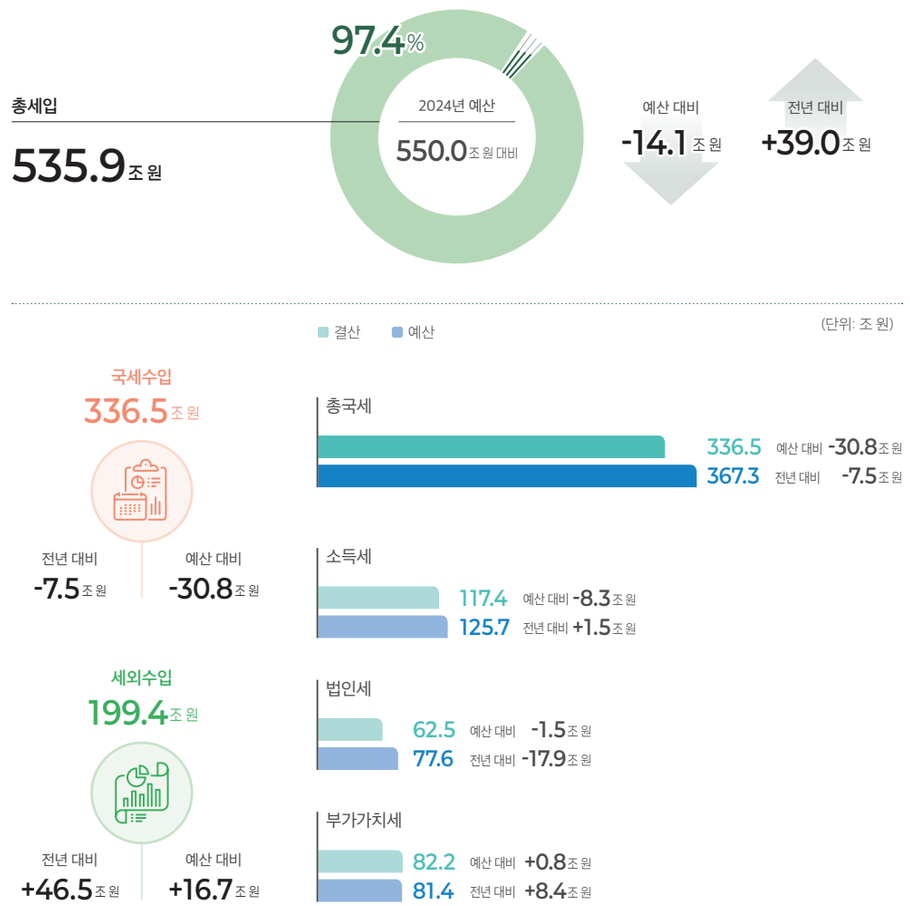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4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 확정**
- **총세입은 535.9조 원, 총세출은 529.5조 원, 세계잉여금은 2.0조 원(일반회계 0.4조 원, 특별회계 1.6조 원) 기록**
  - 총세입은 535.9조 원을 징수하여, 예산(550조 원) 대비 14.1조 원 감소. 국세수입은 336.5조 원, 세외수입은 199.4조 원
  -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 원 중 529.5조 원을 집행
  -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4조 원, 특별회계 1.6조 원이 발생해 전년(2.7조 원) 대비 0.7조 원 감소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2024회계연도 기준



2024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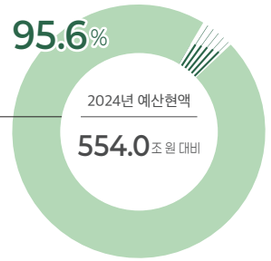
(단위: 조 원)

구분	2023년 실적(A)	2024년 예산(B)	2024년 실적(C)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497.0	550.0	535.9	△14.1	39.0
국세수입	344.1	367.3	336.5	△30.8	△7.5
세외수입	152.9	182.7	199.4	16.7	46.5

총세출

2024회계연도 기준

총세출
529.5조 원



전년 대비
+39.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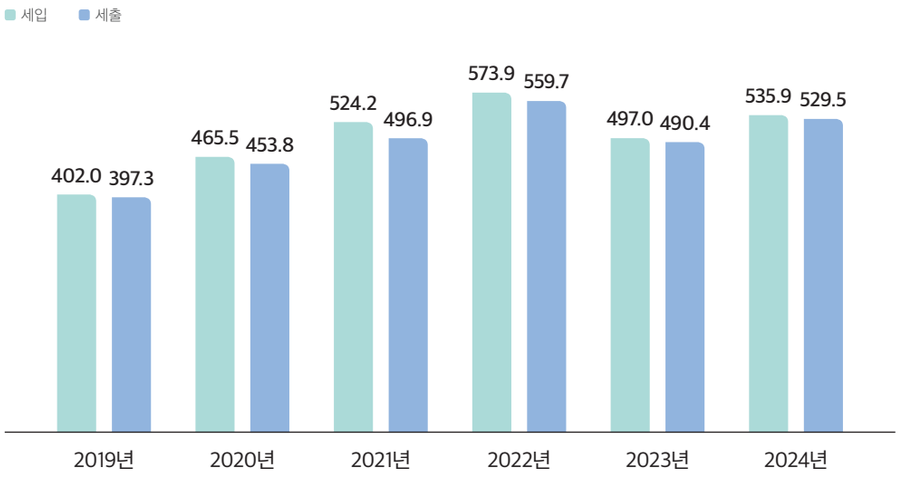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2023년 실적(A)	2024년 예산현액(B)	2024년 지출액(C)	현액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490.4	554.0	529.5	△24.5	39.0
일반회계	405.9	451.6	435.4	△16.1	29.5
특별회계	84.5	102.4	94.0	△8.4	9.5

최근 5년 세입·세출 마감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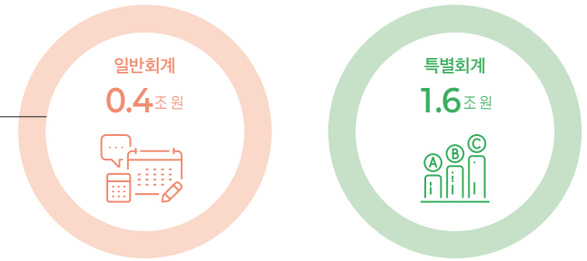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각 연도

세계잉여금

2024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
2.0조 원



세계잉여금의 처리

①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오른쪽 순으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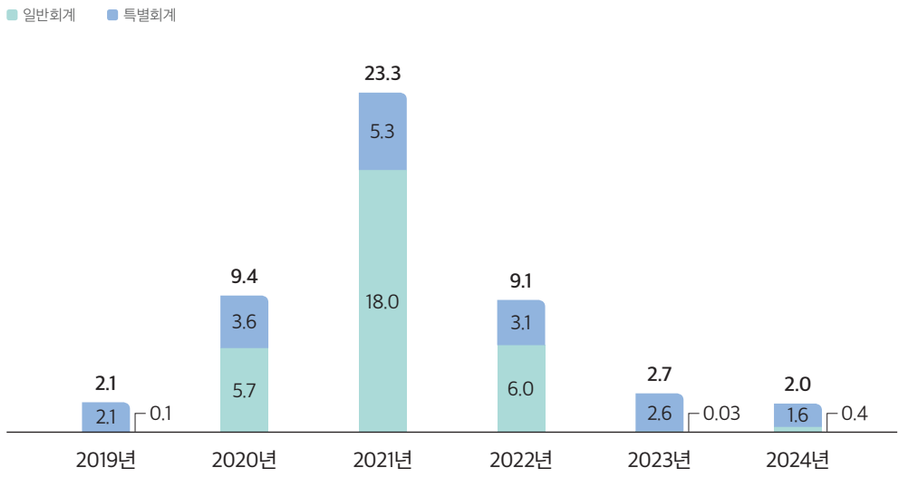
②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 예정



주: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차감한 수치

최근 5년 세계잉여금 규모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각 연도

주요국 월간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수지
미국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3개월 차)	규모	1조 829억 달러	1조 7,939억 달러	7,109억 달러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2%	10.9%	39.4%
독일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4,406억 유로	4,657억 유로	250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2.3%	1.9%	-61.5%
일본 11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8개월 차)	규모	58조 604억 엔	70조 9,161억 엔	12조 8,557억 엔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11.1%	-3.1%	63.2%
프랑스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12개월 차)	규모	3,572억 유로	5,112억 유로	1,539억 유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0.8%	-2.2%	-8.5%
영국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누적 (9개월 차)	규모	8,130억 파운드	9,429억 파운드	1,299억 파운드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3.3%	3.8%	7.3%
대한민국	회계연도 누적 (11개월 차)	규모	542.0조 원	570.1조 원	28.2조 원 적자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4%	3.9%	44.6%

**자료 : • 미국)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Monthly Treasury Statement : December 2024(1.14. 발표)
• 독일) Federal Ministry of Finance, Overview of federal budgetary and financial data up to and including December 2024(1.30. 발표)
• 일본) 재무성, 국고 세입세출 상황(1.20.발표). 일반회계 기준이며 수지는 공식 발표치가 없어 세입-세출 잔액으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일본의 일반회계 수입은 공채(국채)연간 발행 일정 및 이에 따른 수입변동으로 월별 변동이 큼
• 프랑스) La situation du budget de l'État au 31 décembre 2024(2.4.발표)
• 영국)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December 2024(1.22. 발표)

*'24년 12월 말 기준 수치는 4월 말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 예정(위 수치는 지난 호와 동일)

해외재정동향

재정정보분석센터

주요국

1 | 미국

- 재무부는 1월 21부터 국가 디폴트 사태 방지를 위해 공무원연기금 투자지출 중단 등 특별조치에 돌입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2월 4일부터 인상키로 발표하였다가, 향후 30일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 유예키로 2월 3일 발표

2 | 독일

-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는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에 제안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힘

3 | 일본

-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채무 관계 비용이 2028년까지 내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블룸버그가 보도

4 | 프랑스

- 프랑스 의회, 2개월간의 표류와 정부 전복 사태 끝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 2025년 예산안 통과

5 | 영국

- 재정악화 수치 발표 이후 금융시장에서 국채이자율, 환율 급증하는 등 불안감 확대, 영국은행은 이자율을 낮추면서도 성장률은 반락할 것으로 예상
-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등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 무역 강화를 위해 방중

6 | 중국

- 경제부 차관 랴오민(Liao Min)은 2024년 재정운영결과 균형수지 달성이 예상된다고 발표

국제기구

1 | IMF

- "이민과 지역 내 인플레이션(Immigration and local inflation)" 워킹 페이퍼 발간
- "법제도 디자인을 통한 조세 거버넌스 강화(Strengthening tax governance through legal design)" 워킹 페이퍼 발간
- "세계 경제 수정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간

2 | OECD

- "양자기술 정책의 기초(A quantum technologies policy primer)" 디지털경제 정책 보고서 발간
- "정부는 어떻게 대규모 제조업 회사를 돕는가: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 분석(How goverments back the largest manufacturing firms: insights from the OECD MAGIC database)" 통상정책 보고서 발간
- "AI의 미래를 조종하기 : 사전적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Steering AI's future: Strategies for anticipatory governance)" 인공지능 정책 보고서 발간

주요국

미국

1.17.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1월 21부터 부채한도* 도달로 국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무부의 특별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발표[1)]

* 부채한도는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193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3번 인상된 바 있음

- 특별조치는 3월 14일까지 공무원 연기금 및 우편 서비스 퇴직자 건강 혜택 기금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

2.3.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를 유입시킨다는 명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2월 4일부터 인상하고자 하였다가,[2)] 시행 예정일 하루 전에 향후 30일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만 유예키로 발표[3)]

- 토요일(2.1.)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관세를 부과받으며, 중국은 현재 관세에 10%p 가산
  - 캐나다 산 원유는 10%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며 2월 중반에 유류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상됨
- **캐나다, 멕시코는 즉시 보복관세를 선언했으며 중국은 트럼프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함**
  - 특히 캐나다는 1,550억 달러 가치의 미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로 응수하는 한편, 국경에서의 마약 및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협상
  - 멕시코는 미국 접경지역의 군사 단속 강화에 동의하는 한편 미국으로부터 총기류 유입 제한 단속을 약속받음
  -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15% , 크루드오일과 농기계류에 10%의 관세 부과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앞선 금요일, 이러한 관세 인상이 미국인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줄 수 있다고 발언**
  - EY 수석 경제학자 그레그 다코(Greg Daco)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관세는 미국 GDP를 1.5p% 낮추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수 있음
  - 실제로 관세조치가 발표되자 미 주가는 하락하고 국채 이자율은 상승하였으며,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 가치는 하락
- **이번 조치는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부비서실장과 상무부 장관 후보자인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에 의해 주도되었음**

1) https://www.nytimes.com/2025/01/17/us/politics/debt-default-jan-21-yellen-treasury.html
2) https://reuters.com/busin ess/trump-readies-order-steep-tariffs-goods-mexico-canada-china-2025-02-01
3) https://bbc.com/news/articles/c87d5rlee52o

독일

2.2.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는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인상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에 제안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힘[4)]

- Tages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러한 인상은 불필요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언급
  - GDP대비 5%는 연방예산의 42%에 해당하며, 2,3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
-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방위비를 각국이 분담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놓았으며, 최근 5%였던 목표치를 백악관 발언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미국의 현재 지출규모는 GDP의 3.4%로 목표에 미달
  -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현재 GDP 대비 2.12% 수준에 도달했으며, 독 정부는 국방분야에 대해 이보다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계획

일본

1.30.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채무관계비용*이 2028년까지 내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블룸버그가 보도[5)]

* 채무관계비용이란 이자지급액과 신규 부채 발행액의 합계를 의미

- 재무성 전망 중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8년 채무관계비용은 35.3조 엔으로 이번 회계연도 대비 25% 증가
  - 낙관적 시나리오는 2026년부터 3%의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이후 2년간 2%의 물가상승률을 가정
  - 보다 보수적인 1.5%의 경상성장률 유지 가정에서는, 정부는 2028회계연도에 34.8조 엔의 채무관계비용을 예상

프랑스

2.6. 프랑스 의회, 2개월간의 표류와 정부 전복 사태 끝에 회계연도 개시 이후 2025년 예산안 통과[6)]

- 에릭 롱바르(Eric Lombard) 재무부 장관은 상원 연설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5.4%로 제한하는 2025년 예산안 채택을 환영

4) politico.eu/article/germany-boris-pistorius-pushes-back-donald-trump-nato-spending-demand/
5)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5/01/30/economy/boj-hike-debt/
6) https://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5/02/06/french-parliament-finally-passes-2025-budget_6737858_7.html#

- 전례 없는 노력을 통한 공공지출 300억 유로 절감 및 개인의 능력에 비례한 세금 인상분 200억 유로로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 현 제도 유지 시 예상 적자비율은 6.1%이며, 전임 정부는 이를 5%까지 감축시키기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을 추진하다 12월 좌초

• 바이루(Bayrou) 총리는 이보다 앞선 2월 3일, 정부 예산안 및 사회보장예산안을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여 투표 없이 하원 통과

- 전임 미셸 바르니에 총리도 이와 같이 예산안 통과를 시도하였으나, 불신임 투표로 정부가 해산된 바 있음
- 이번에도 극좌 성향 정당 LFI는 총리 불신임안을 제안하였으나 극우 국민연합(RN)과 중도 사회주의당(PS)은 동의하지 않아 바이루 정부는 지속

영국

1.29.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저성장 전망 극복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방중[7]하고, 이후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한 투자계획도 발표[8]

• 금융 서비스 거래 및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포함해 이번에 중국과 체결한 협정은 향후 5년 동안 영국 경제에 6억 파운드(7억 3,200만 달러)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

• 제3활주로 건설은 2018년 관련 법 통과 이후 환경단체 압박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어 왔으나, 실행 시 10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5. 재정악화 수치 발표 이후 금융시장에서 국채이자율, 환율 급증하는 등 불안감 확대, 영국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낮추면서도 성장률은 반락할 것으로 예상[9]

• 금리는 4.75%에서 4.5%로 인하하였는데, 이러한 금리는 최근 18개월 중 최저 수준에 해당

• 통상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에 따른 보다 높은 성장률로 이어지나, 중앙은행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75%로 하향조정

- 이는 금년 1사분기 성장률이 0.1%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따름
- 한편 올해 전망치는 낮추면서도, 영 중앙은행은 2026년과 2027년에 대한 전망치는 각각 1.25%에서 1.5%로 상향조정

7) https://www.reuters.com/world/uks-reeves-seeks-common-ground-with-china-trade-ties-2025-01-11/
8) https://www.reuters.com/world/uk/uks-reeves-gears-up-fight-get-economy-growing-again-2025-01-28/
9) https://www.bbc.com/news/articles/c0lzj3g77gpo

중국

1.10. 2024년 재정운영결과 균형수지 달성이 예상된다고 경제부 차관 랴오민(Liao Min)이 발표[10]

• 2024년 적자재정 규모는 3%로 예상되었던 바 있으나, 중국의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음에 따라 예산 균형을 달성할 전망

• 그러나 2025년 적자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며,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발언

- 2025년에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재정 총지출을 더욱 확대하고,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을 제공할 것
-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국제기구

IMF

1.10. "이민과 지역 내 인플레이션(Immigration and local inflation)" 워킹 페이퍼 발간[11]

• 미국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모형(shift-share approach*) 활용해 분석한 결과, 높은 이민자 유입률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 이민자 수가 두 배가 될 때 인플레이션율은 0.1~0.2%포인트 하락

  * 지역의 경제 성장을 국가, 고용과 산업경쟁력 증가, 지역 자체의 영향 등으로 분해하는 분석방법

- 이민자 유입은 상품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주거와 유틸리티(가스 등) 인플레이션은 높이나, 다른 영역에 유의한 효과는 없음. 또한 이러한 효과는 근로연령대 이민자 유입, 저학력 근로자 유입 시 약 두세배로 나타남

• 고학력 근로자 유입이 전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이들이 지역 주택 시장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것은 확실함

1.17. "세계 경제 수정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간[12]

•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모두 3.3%로 예상되며, 이는 2000년~2019년 평균인 3.7%보다 낮음. 미국에 대해 상향 수정된 2025년 전망치는 다른 주요 경제권의 하향 수정을 상쇄한 데 따라, 2024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음

10) https://www.chinadailyhk.com/hk/article/602130
11)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5/01/10/Immigration-and-Local-Inflation-560285
1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1/17/world-economic-outlook-update-january-2025?cid=ca-com-compd-pubs_belt

- 동 기간 세계 물가상승률은 선진국 그룹이 개도국이나 신흥국보다 먼저 하락하여 2025년 4.2%, 2026년 3.5%로 감소할 전망

• 중기적인 리스크 요인은 하방에 치우쳐 있으며, 단기 상향 요인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이외 국가는 정책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하향 위험에 처해 있음

- 재정정책은 공공부채를 지속 가능하게 하면서 보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민첩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다 건전화(consolidate)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활동을 해치지 않기 위해 점진적이지만 상당한 규모를 가져야 하고,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장기적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있어야 함

1.17. "법제도 디자인을 통한 세무행정체계 강화(Strengthening tax governance through legal design)" 워킹 페이퍼 발간[13)]

• 건실한 세무행정체계 설계에 있어 핵심적인 법적 원칙들을 도출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행정 및 조세 절차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설계 방식을 제공

- 핵심적 원칙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 공평성, 효율성과 효과성 등임
- 이후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세무 절차, 세무 행정 권한과 적절한 납세자 보호간 균형 등을 포함해 조세 행정 법률에 포함돼야 하는 주요 법적 기능을 도출함

OECD

1.28. "양자기술 정책의 기초(A quantum technologies policy primer)" 디지털 경제 정책보고서 발간

• 양자역학기술(Quantum technologies)은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 양자 센서, 양자 컴퓨팅 및 양자 통신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전송하는 기술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이 기술의 상업적 활용 예상 사례 및 사회적 문제 해결 사례를 간략히 점검하여 예상되는 사회 변화의 모습을 살펴봄

• 양자기술에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그리고 국가 안보 위험도 결부되어 있음

- 현행 암호 보안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위험으로 꼽히고 있음
- 신생 산업생태계 지원, 공급망 제약요건 및 숙련된 인력 육성 등에 주요 정책 과제 존재

• 양자기술이 인간중심, 가치 기반적으로 발전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예측적 거버넌스가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

13)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5/01/17/Strengthening-Tax-Governance-Through-Legal-Design-559303

2.4. "정부는 어떻게 대규모 제조업 회사를 돕는가: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 분석(How goverments back the largest manufaturing firms: insights from the OECD MAGIC database)" 통상정책 보고서 발간

• OECD 일부 회원국 및 비회원국 14개 산업섹터의 2005~2022년 자료를 담고 있는 OECD MAnufacturing Groups and Industrial Corporation(MAGIC)데이터분석을 통해서 산업 보조금 연구

• 대규모 생산기업은 보조금을 광범위하게 받고 있으나 평균 규모는 수입(revenue)의 0.6%(중앙값 기준)로 크지 않음

- 그런데 중국의 알루미늄, 시멘트, 유리, 반도체 섹터 기업은 수입의 15%를 넘는 규모를 받았으며 수령 기간도 더 길고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은 수입 대비 보조금 비율이 더 높음
- 데이터상 대부분의 대규모 생산기업이 관측기간의 절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부 지원을 수령
- 이런 보조금은 기업의 고정자산 혹은 유형자산 투자와 관계가 높음

2.7. "AI의 미래를 조종하기 : 사전적 거버넌스를 위한 전략 (Steering AI's future: Strategies for anticipatory governance)" 인공지능 정책 보고서 발간

• OECD의 '신흥 기술에 대한 사전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상 다음 다섯 개의 요소가 OECD AI 원칙, AI시스템 분류 체계 등의 관련 이니셔티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분석

- 가치 정립 : OECD AI원칙이 강조하듯 혁신이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본적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활용의 최전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가치를 숙고할 수 있는 굳건한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함
- 전략적 정보 수집 : 최근 동향, 위험,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OECD의 AI Incidents Monitor (AIM)와 같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경계 도구가 핵심적
- 이해관계자 참여 : AI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on AI)이나, OECD AI거버넌스 워킹그룹(AIGO)과 같이 정보 확산, 상호협력, 공개 논의 등의 활동에 참여
- 기민한 규제 : 기술혁신이 인종, 안전 문제와 균형을 확보하는 데에 적응적 접근이 기여할 수 있으며,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기민한 AI 규제 방식 예시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술표준간 호환, AI를 위한 '책임사업규약(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등 존재
- 국제 협력 : AI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함

02

2025
February

Fiscal Calendar

재정

2025년 2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1.31.)

- 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연간 발행계획 및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 발행 예정
-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 20년물 2.77%)를 적용
-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 예정

경제

2024년 연간 산업활동 동향·평가 발표 (기획재정부, 2.3.)

- 2024년 연간 산업활동은 수출 증가 등으로 광공업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서비스업의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설비 투자가 크게 반등했으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판매가 감소

* 산업활동(%,'23→'24) : (전산업) 1.0→1.7 (광공업) 2.6→4.1 (서비스업) 3.2→1.4 (소매판매) 1.5→2.2 (설비투자) 4.9→4.1 (건설기성) 7.3→4.9

-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18조 원 경기보강 패키지, 재정 신속집행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통계청, 2.5.)

-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상승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0.5%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

1월
재정
- 2026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4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발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월
재정
- 2024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4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발표

3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4월
재정
- 2024년 결산 검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5월
재정
- 202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 2026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24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 2024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경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5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6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통계청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7월
재정
-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통계청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8월
재정
-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경제
- 통계청 2025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한국은행 경제전망 발표

9월
재정
- 2026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0월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발표

국제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WorldEconomic Outlook) 발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11월
경제
- 통계청 2025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12월
재정
- 2026년 예산 확정

경제
- 한국은행 2025년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나라는 누가 지켜나가는가?

고려 시대에 거란의 3차례 침입과 9차에 걸친 몽골의 침입은 우리 역사상 어려운 시기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러한 외세의 침입을 고려는 대장경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겨내고자 하였다. 전쟁과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대장경을 만드는 일은 그러나 마비될 뻔한 행정과 조세 체계를 살아나게 하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글 • **조경철** 연세대학교 사학과 객원 교수, 나라이름역사연구소 소장, 한국사상사학회 회장

01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陜川 海印寺 大藏經板)

고려대장경(재조대장경), 200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 판수: 81,258장(일제 강점기 조사)
· 구성: 1,496종 6,568권
· 경판 크기: 가로 70㎝ 내외, 세로 24㎝ 내외
· 두께: 2.6cm~4cm
· 무게: 3kg~4kg



서유기의 삼장법사는 당나라 현장스님을 말한다. 현장은 인도에 가서 새로운 불경을 가져왔고 그가 당나라와 인도를 오가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엮은 것이 서유기다. 삼장법사는 현장의 또 다른 별명처럼 알고 있지만 현장스님만을 말하는 고유명사는 아니다. 삼장법사는 현장 말고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삼장(三藏)은 대장(大藏)의 다른 말로 장(藏)은 인도에서 패엽경으로 된 불경을 담았던 광주리를 말한다. 삼장은 부처의 말씀을 적은 경장, 승려가 지켜야 할 율장, 경과 율을 해석한 논장을 말한다. 이 삼장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대장이 된다. 사실 대장경의 원어도 '3'이 들어간 트리피타카(Tripitaka)다.

고려대장경은 고려에서 만든 대장경을 말한다. 보통 고려대장경은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고려 고종 때 만든 팔만대장경(또는 재조대장경)을 말하지만 고려에는 팔만대장경 말고 다른 대장경도 있었다. 고려 현종 때 만든 초조대장경이 그것이다. 또 의천이 경율론 삼장의 주석서를 모은 교장(敎藏)이 있다. 흔히 교장을 속(대)장경이라고 부르는데 경율론 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장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고려 현종 때 처음 대장경을 만든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불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220여 년 뒤 무신정권 때 활약했던 문인 이규보가 남긴 '대장각판군신기고문'에 나와 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군사력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달단이 환란을 일으킴이여! --- 이에 부인사에 소장된 대장경판본도 또한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 거란이 쳐들어오자 --- 현종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더할 수 없는 큰 서원을 발하여 대장경 판본을 판각해 이루니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 지금의 달단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

(이규보, 1237, '대장각판군신기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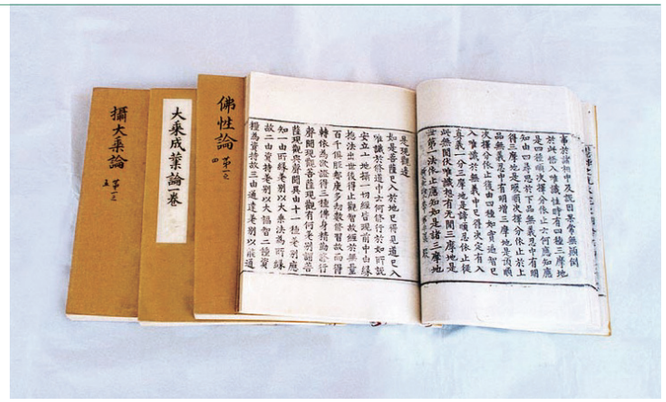


이규보는 몽골(달단)이 쳐들어와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초조대장경을 불태웠다고 한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이 거란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했고 그 힘으로 거란이 물러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도 재조대장경을 만들어 몽골군을 물리치자고 하였다. 고려 현종 때(재위 1009~1031) 맨 처음 초조대장경을 만든 이유는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거란은 993년, 1010년, 1018년 3차에 걸쳐 고려에 쳐들어왔다.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치기도 했다. 이후 거란은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다. 고려가 힘으로 거란을 물리쳤지만 사람들은 부처님의 힘(초조대장경)으로 거란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건 군사력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대장경을 만들면서 고려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거란은 물리쳤지만 몽골은 더 강적이었다. 몽골은 1231년 1차 침입(1231.8~1232.1)을 시작으로 1257년까지 총 9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26년간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없어도 전쟁처럼 살아가야 했다. 당시 고려의 왕은 고종(재위, 1213~1259)이었고 실권은 무인이 잡고 있었다. 1232년 6월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자 최이는 몽골과 장기전을 펼치기 위해 도읍을 개경에서 강화로 옮겼다. 몽골은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초조대장경을 불태웠다.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편, 처인성에서는 승려 출신 김윤후가 몽골 원수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고려와 몽골은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되었다.

02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해인사의 고려대장경 경판에서
한지에 직접 찍음
모든 대장경은 8만 4천 법문을 실음
경판이 8만 여 경판이라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림
· 크기: 가로 84.6㎝, 세로 24㎝
· 구성: 천자문 순
총 1,511부 6,802권 81,137판



03 강화 남문

몽골 침입 당시 고려가 수도를 옮겨 팔만대장경 제작을 주도한 강화 도성에 위치한 문.
국가적 정체성과 불교 신앙의 결속을 보여주는 장소다.



1232년 초조대장경이 불타자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초조대장경이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몽골의 침략으로 불태워졌기 때문에 다시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 몽골이 1235년 3차 침략을 하게 되자 상황이 더 급해졌다. 일단 고려 정부는 1236년 대장경 판각을 도모할 기구로 강화에 대장도감을 만들었다. '도감'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로 설치된 임시기구로 지금의 '위원회'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대장도감을 설치한 다음 고려는 본격적인 재조대장경의 조성에 들어갔고 앞서 언급한 이규보의 '대장각판군신기고문'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몇 년 뒤 대장도감을 도와 줄 분사대장도감을 여러 지방에 세웠고 대장경 조성은 더 속도를 내게 되었다.

재조대장경은 1236년 시작하여 1251년 마무리 되었다. 총 16년이 걸렸다. 1236~1251 이 기간은 몽골의 침략 기간인 1231~1257의 한 가운데 있는 기간이다.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평시에도 만들기 어려운 재조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재조대장경의 절반가량은 몽골의 3차 침입(1235~1239)과 4차 침입(1247~1248) 사이인 1240~1246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04 처인성 전투

1232년, 고려군이
몽골 침략에 맞서 승리한
처인성 전투.
국가 보호와 불교 신앙에 기반한
결속의 상징적 사건이다.



05 국보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陜川 海印寺 藏經板殿)

15세기 건축물로 세계 유일의 대장경판 보관용 건물
1995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해인사에 남아있는 건물 중 가장 오래되었다. 앞면 15칸·옆면 2칸 크기의 두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였는데, 남쪽 건물은 '수다라장'이라 하고 북쪽의 건물은 '법보전'이라 한다. 서쪽과 동쪽에는 앞면 2칸·옆면 1칸 규모의 작은 서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긴 네모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대장경판을 보관하는 건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식 요소는 두지 않았으며, 통풍을 위하여 창의 크기를 남쪽과 북쪽을 서로 다르게 하고 칸마다 창을 내었다. 또한 안쪽 흙바닥 속에 숯과 횟가루, 소금을 모래와 함께 차례로 넣음으로써 습도를 조절하도록 하였다.

재조대장경 조판을 하면서 각 지방관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마비될 뻔한 행정체계와 조세체계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 국가재정에 숨을 트게 한 것이다.

재조대장경의 분량은 조선왕조실록과 맞먹는다. 재조대장경의 글자 수는 약 5천 2백만 자, 조선왕조실록의 글자 수는 약 5천 6백만 자로 추정된다. 더구나 재조대장경은 금속활자로 찍어낸 조선왕조실록과 달리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방식이라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재조대장경의 경판은 약 8만여 경판인데 앞뒤가 경전이다. 총 16만 면이 된다. 1면의 글자가 평균 32.5자다. 각수가 평균 새길 수 있는 글자 수가 30여 자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 상상이 안간다. 더구나 경판에 글씨를 새기는 일은 대장경을 만드는 마지막 과정에 불과하다. 나무를 베고, 나무를 바다에 담그고 말리고, 종이에 경전을 쓰고, 글씨도 한사람이 쓴 듯 한사람이 새긴 듯 훈련을 받아야 하는 등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야말로 막대한 인력과 자본이 들어가는 국가 사업이었다.

따라서 집권층이 먼저 솔선수범하였다. 최우는 사재를 기울여 대장경의 반을 조판했다고 한다. 최우의 장인의 아들인 정안도 사재를 희사하여 대장경 조판 비용의 반을 부담하였다고 한다.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다른 신료들도 일부 부담했을 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조대장경 조성 비용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라도 비용을 각지에 분담시켰을 것이다. 비용뿐만 아니라 나무의 수급 등 제반 과정도 분담시켰을 것은 당연하다.

고려가 세계 최강 몽골과 26년간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어디에 있었을까. 최씨 무인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가능했을까. 강화로 천도해서 가능했을까. 나는 재조대장경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힘, 열렬한 신앙심, 대장경으로 하나된 마음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재정의 힘이다.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것이 국가재정의 확보였다.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강화로 천도한 정부에 대해서 본토의 백성들은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이 많았을 것이다. 몽골군이 휘젓고 다니는 상황에서 지방 행정은 마비되고 세금을 걷는 체계도 엉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재조대장경 조판을 하면서 각 지방관에게 비용을 분담시키고 인력을 재배치하게 함으로써 마비될 뻔한 행정체계와 조세체계도 같이 살아나게 되어 국가재정에 숨을 트게 한 것이다.

재조대장경은 인력과 자본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재조대장경이 위대한 것은 정확성과 글씨의 아름다움에 있다. 재조대장경은 당시 동아시아에 존재한 모든 대장경의 결정판이다. 고려는 송나라의 대장경과 거란의 대장경과 불탄 고려의 초조대장경(인쇄본)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대장경을 만들었다. 더 위대한 것은 한국 역사상 몽골의 침입이라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재조대장경 만들 시간에 칼과 활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반문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싸움은 칼과 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재조대장경의 1차 목적은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는 것이었지만 장기간 몽골과 전쟁할 수 있었던 기반은 재조대장경으로 파생된 국가재정의 회복이었다. 물론 고려는 재조대장경을 만들었지만 결국 몽골에 항복했다. 그러나 역사는 긴 싸움이다. 그때는 몽골에 항복했지만 지금 재조대장경은 세계기록문화유산이 되어 세계인이 향유하는 세계유산이 되었다. 고려를 항복시킨 몽골은 지금 그때의 영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과연 고려가 지기만 한 것일까.

나라는 누가 지켜온 것일까. 강감찬, 현종, 고종, 최우, 정안, 김윤후 등등 교과서 속 인물들일까. 재조대장경 경판에는 수천의 각수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유학자나 승려들의 이름들도 있지만 경판에만 나오는 이름 모를 사람들도 많다. 적의, 명승, 공보 등등. 한 자 한 자 새기면서 부처님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한 이름 모를 사람들이 나라를 지켜온 건 아닐까.

06 강화 고려궁지(江華 高麗宮址)

고려가 몽골군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고종 19년(1232)에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1234년에 세운 궁궐과 관아건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들:
조직과 계약의 거버넌스

글•**옥동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전조세재정연구원장

전통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는 변화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파레토 개선'이라 하는데, 신고전파 경제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설령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합계가 손해의 합계를 초과한다면 그 변화는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익 일부를 손해를 보상하는데 사용하면 '파레토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손해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1)]

신고전파 경제학에 의하면, 시장 기능이 완전하면 -완전한 정보와 합리적 행동을 전제하는- '파레토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거래들이 수행된다. 완전한 시장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한계지불용의(수요곡선으로 표현되는)가 공급자들의 한계생산비용(공급곡선으로 표현되는)보다 높으면 거래가 형성되는데, 이들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의 시장은 완전하지 않기에 이 수준을 벗어나 거래가 형성되어 한계지불용의와 한계생산비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들을 시장실패라 하는데 그 요인들은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등 매우 다양하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적극 교정하여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가격 또는 거래량을 규제하거나, 조세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전파의 이러한 인식은 1970년대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한 부류의 학자들은(공공선택론) '정부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자애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오묘하고도 풍요로운 시장을 감히 교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정부실패'를 간과한 교만함의 발로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거래비용 경제학) '다양한 시장실패가 민간부문에서도 사실상 해결되고 있는데 왜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가! 그것은 민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간과한 몽매함의 발로이다'라고 비판을 한다.

| 거래비용과 신제도경제학

이 후자의 입장은 신고전파의 완전한 시장이 거래비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 시장을 전제한다고 비판한다. 현실의 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지불용의가 그 생산비용보다 높다 하더라도, 적절한 거래상대방을 탐색하여 흥정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래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 '파레토 개선'을 가져오는 거래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이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거래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시장실패의 교정 수단을 정부개입(규제, 조세, 보조금, 공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비용을 줄이는 민간의 제반 기제들(arrangements)(계약, 조직, 거버넌스)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경제분석에 거래비용을 도입한 최초의 시도는 기업이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임을 강조한 코즈(Ronald H. Coase)의 1937년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이라는 논문에서 시작한다. 코즈의 지적은 특히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에 의해 발전하였는데, 그는 거래비용을 전통적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 내에서 분해하며 그 적용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였다. 경제분석에 거래비용을 포함할 때 우리는 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의 작동에서 중요한 많은

1) 이들에 대한 논의는 옥동석(2024), "사회후생의 기준: 칼도-힉스 기준에 대하여," 2023년 6월호, 「나라재정」, pp.34~41 참조.

제도적 요소(재산권, 화폐, 규범과 관습)를 이해할 수 있다. 그의 분석은 기존의 제도경제학과 달리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을 수용하면서 거래비용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명하기에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2)]

사람들이 거래를 꺼리는 이유, 즉 거래비용의 원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opportunistic) 행동 때문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자 항상 전략적으로-거짓말 또는 부(不)정직한- 행동할 유인을 갖고 있다. 둘째, 거래는 항상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거래한다 하더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의 내용에 대한 갈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미래의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모두 파악하고 각 상황에서 거래자들의 위험 분담을 사전에 완벽하게 약정해 놓을 수는 없다.

거래비용의 발생 원천을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한 앞의 분석은 거래비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거래들에서 거래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거래비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거래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윌리엄슨은 거래비용을 좌우하는 관찰 가능한 핵심 특징을 자산특정성(asset specificity), 거래의 불확실성/복잡성(uncertainty/complexity), 거래빈도(frequency)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산특정성은 범용적 용도가 아닌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자산의 특성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 그 자산의 가치가 심각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거래자가 잠금(lock-in)에 채워질 위험으로 거래비용이 높아진다. 그리고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복잡성이 클수록 거래의 표준화/정형화는 더 어려워지기에 거래비용은 높아질 것이며, 또 거래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거래의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보험, 소송-의 도입비용은 더 넓게 확산할 수 있다.

| 윌리엄슨의 거버넌스 정렬

윌리엄슨은 거래비용의 요인들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여러 제도적 기제(또는 거버넌스)를 각각의 거래에 적절하게 정렬(alignment)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질서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형태는 시장(market), 하이브리드(hybrid), 위계(hierarchy)로 구분할 수 있다. 위계는 기업 등 조직을 의미하고, 하이브리드는 시장과 위계의 중간적 형태로서 신뢰가능한 장기계약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지가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과 (위계)조직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 형태를 띤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시장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현물시장(spot market)인데, 여기서는 거래자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거래자들은 시장의 가격을 파악하고 이 가격 수준에서 거래할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기에 오직 가격이 이들의 거래를 조정할 뿐이다. 다시 말해 거래 상대방의 인격, 자질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설령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이 존재하기에 재산권과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규율이 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그런데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래들이 있다. 특히 자산특정성이 높고, 불확실성/복잡성이 높으며, 빈도가 낮은 거래들은 일반적인 시장가격 또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표준계약만을 기초로 수행되기 어렵다. 이들은 가격기구가 아니라 중앙의 명령과 통제가 작동하는 조직 내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다. 조직 내에서는 협상 없이 각종 자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고, 조직의 구성원들(또는 거래자들)이 조직의 생존을 위해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며, 또 구성원들은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맺어 왔기에 정보와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4)]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위계)조직은 시장에서 성립하지 않는 거래들을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다양한 시장 실패들을 교정하고 있다.

시장과 (위계)조직 중간에 위치하는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장기계약 형태를 띠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거래자들은 독립적인 결정을 하기에 시장의 특징을 보유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계)조직처럼 그들의 자원을 풀링하여 공동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분권화된 의사결정의 이점을 잃지 않으면서 상호 조정을 위한 협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하여 하이브리드에서는 주된 거래 내용 이외에 거래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관계 또는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을 형성하며 신뢰를 지속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에서 거래자들은 일부에서는 협력하지만 서로 경쟁하기도 하는데, 공동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자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위반을 징계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다.

| 표 | 거버넌스의 형태별 특성

거버넌스 특성	거버넌스 형태		
	시장	하이브리드 (계약)	위계 (조직)
인센티브 효과	고-강도	중간	저-강도
행정적 관료주의	없음	약간	많음
갈등해결장치	소송 등 법원	관계계약	조직 내부절차

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윌리엄슨의 설명을 일부 보완함.
자료: Williamson, Oliver E.(2008), "Transaction Cost Economics," in Claude Ménard and Mary M. Shirley, eds.,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pringer, 2008, p.49.

<표 1>은 이들 세 가지 형태의 거버넌스가 갖는 장단점을 인센티브 효과, 행정적 관료주의, 갈등해결장치의 특성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시장은 사전적 약정(commitment)이 분명하고 강력하기에 갈등은 법적 규율로 해결되고, 행정적 관료주의의 폐해는 거의 없으며, 인센티브 효과가 높아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된다. 반면 위계의 조직은 사전적 약정보다 의식적이고 의도적이며 목적이 있는 협력적 응변(cooperative adaptation)이 강하여 행정적 관료주의가 강하고 인센티브 효과는 낮지만, 제반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은 시장보다 훨씬 낮다. 결국 세 가지 형태의 거버넌스는 사전적 약정과 협력적 응변의 성격이 혼재되는 정도를 반영하는 연속선상에서 펼쳐질 것이다.

2) Ménard, Claude and Mary M. Shirley(2008), "Introduction," in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edited by Claude Ménard and Mary M. Shirley, Springer, pp.1~4 참조.

3) Hayek, F. A.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5(4), 특히 제Ⅴ절의 내용 참조.

4) Menard, Claude(2008),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to Organization," in Claude Ménard and Mary M. Shirley, eds., *Handbook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Springer, pp.281~318 참조.

| 계약의 다양한 형태

거버넌스 형태가 약정과 협력적 응변의 연속적 스펙트럼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에 속하는 장기계약도 이들이 혼재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약정이 강하여 시장에 가까운 '시장계약(market contract)'과 사후적 응변이 강하여 조직의 위계를 반영하는 '관계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하이브리드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윌리엄슨의 거버넌스 정렬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다양한 거래들에 적절하게 대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외부의 기관들과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를 조달계약(procurement contracts), 출연협약(grant agreements), 협력협약(cooperative agreements)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래에 적절한 형태를 정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5] 조달계약은 엄격한 형태의 시장계약을 의미하고, 협력협약은 가장 느슨하고 개괄적 형태의 협약으로 관계계약의 성격이 가장 강하며, 출연협약은 이들의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응변적 개입 또는 통제는 협력협약에서 가장 높으며 조달계약에서 가장 낮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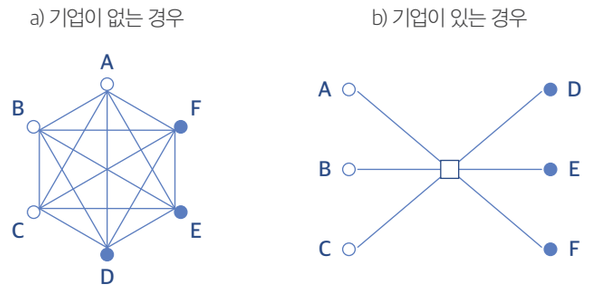
시장계약인 조달계약의 형태도 사후적 응변, 즉 발주자의 관리·통제 수준에 따라 세분될 수 있는데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가격(fixed-price)과 원가보전(cost-reimbursable) 계약을 대별할 수 있다. 고정가격 계약은 제공하기로 정의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에 대해 고정가격의 총액을 지불하는 계약으로써, 요구되는 산출물과 성과를 사전에 약정할 수 있을 때 확정적인 가격으로 협상할 수 있다. 반면 원가보전 계약은 완료한 작업에서 발생한 모든 합법적인 실제 원가 그리고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불(보전)하는 계약인데, 발주자와 계약자가 작업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거나 작업의 결과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물론 고정가격, 원가보전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이들 계약의 하위 유형들도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6]

| 조직의 다양한 소유권 형태

(위계)조직도 사전적 약정이 강한 '시장계약'과 사후적 응변이 강한 '관계계약'의 혼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또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조직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소유권의 부여 형태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활용하는 설명이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7]

예컨대, 거래자 A, B, C가 제공한 생산요소들이 생산과정을 거쳐 수요자 D, E, F에 제공되는 과정을 살펴보자([그림 1] 참조). 별도의 생산조직이 없는 경우(그림의 a), 3명의 투입물 제공자와 3명의 산출물 수요자 사이에는 실선으로 표시된 15번의 시장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생산과정을 위한 조직이 창설된다면(그림의 b에서 □ 표시) 3명의 투입물 판매자와 3명의 산출물 구매자는 이 조직과 시장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에서는 시장계약들로 인한 계약상 의무가 모두 완제된 이후에 남는 이윤 또는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즉, 잔여청구권(residual claims)-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 그림 | 시장거래와 조직



일반적으로 '잔여청구권'을 보유하는 사람은 조직에 대한 '통제권(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들을 조직의 소유권자라고 말한다. 이들 소유권자는 조직의 거래자 집단 중에서 나타나는데, 특정 거래자 집단이 소유권자가 되면 이 집단과 조직 사이의 시장계약은 소유권 관계로 바뀌고 또 이에 따라 이들 사이에 나타나던 시장계약 거래비용(cost of market contracting)은 소유권 거래비용(cost of ownership)으로 전환하게 된다.[8] 따라서 조직에서 나타나는 총거래비용은 소유권자 집단의 소유권 거래비용과 나머지 집단들의 시장계약 거래비용의 합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조직의 소유권자는 어느 집단이 되어야 하는가? 신제도경제학은 비용극소화의 원리, 즉 총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따라 조직의 소유권자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9] 다시 말해 소유권의 거래비용과 시장계약의 거래비용 합계인 총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소유권 부여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계약의 거래비용이 가장 높은 집단(또는 '시장실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래 집단)이 소유권자가 될 때 총거래비용이 가장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선택된 소유권자 집단이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거래자들이라면 생산자조합(예컨대, 농업협동조합)이 되고, 생산물의 소비자들이라면 소비자조합(예컨대, 주택조합)이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생산요소의 일종인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기에 일종의 생산자조합이 된다.[10]

그런데 거래자 집단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총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조직에 대한 통제권을 내부의 경영진 또는 직원들이 행사하고, '잔여청구권'이 그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조직의 수입이나 자산의 분배를 금지하는 '비분배 제약(nondistribution constraint)'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로 자선단체, 구호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은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자선과 구호를 위해 법인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사람들-가 스스로 감시하기 어려울 때 등장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도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OMB Circular A-102, "Gran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MB Circular A-110, "Uniform Administrative Requirements for Grants and Agreements With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Hospitals, and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참조.
6) 미국 연방정부의 다양한 계약유형에 대해서는 Tierney, Cornelius E. and Robert D. Hoffman(1976), *Federal Financial Management: Accounting and Auditing Practices*, New York: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pp.110~115 참조.
7) Hansmann, Henry(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8) 소유권 거래비용은 경영자 통제의 비용, 집단적 의사결정의 비용, 위험부담의 비용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Hansmann(1996), 제3장 참조.
9) Hansmann(1996) 제1장 참조.
10) Hansmann(1996)은 다양한 형태의 조합, 기업, 비영리기관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흥안보 위협과 첨단 바이오 방위산업 전망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방위사업학박사

신흥안보 위협 부상과 팬데믹 감염병 사태 군사부문 안보 대비

전 세계는 이른바 '신냉전(New Cold War)'의 구도 속에서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에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군사력 강화와 첨단 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통한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국가의 존립과 전쟁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국방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팬데믹(Pandemic) 코로나(COVID)19의 위협 속에서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대규모 질병 감염 사태 대비라는 새로운 난제가 주어졌다.

이처럼 오늘날 종래의 물리적 위협 형태가 아닌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내지는 신안보 또는 포괄안보로도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이외에 식량, 자원, 에너지 안보 등의 다양한 위협 요소가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구와 인류 전체를 파괴하는 가혹한 살상 행위는 대규모 질병 감염 위기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WMD)에 해당하는 세균전 등 생화학무기의 위협에까지 이르렀으며, 이는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과 직결되는 먹거리와 헬스 바이오 관련 산업 분야가 민간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방 및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기술적 차원 접근과 안보적 측면 고려

바이오(Bio)는 '생'이나 '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로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어원이 유래됐다. 주로 생명, 생물, 인간의 삶과 관련된 전 영역을 일컬어 '바이오'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바이오산업(BT, Biotechnology)으로 발전하여 생물 기능과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21세기 대표적인 지구촌 부흥 산업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2023년 5월 개최된 '스트롱코리아 포럼'에서 바이오

핵심소재 생산업체 제노포커스社의 반재구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바이오 위기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가 전략기술적 차원에서 바이오 기술을 국방의 안전한 기틀로 활용한다면 군과 민간을 아우르는 '바이오 안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포럼 세션에서 박한오 바이오니아社 회장도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보건 안보 분야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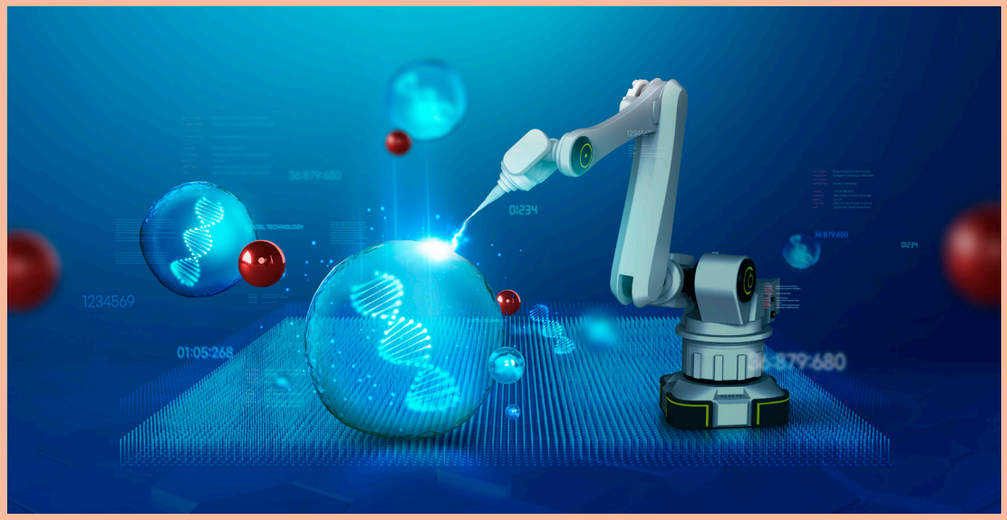
결국, 초고속 백신 개발 발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범용 항생제 관련 연구개발(R&D)을 촉진해야 함을 역설한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자연 발생적 병원균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군사용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전염병을 퍼뜨려 국방력을 흔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국가를 방위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미국이 해마다 전체 국가재정 중 국방비 예산에서 10분의 1가량을 바이오 안보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배경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첨단 바이오 방위산업 분야 발굴 및 푸드 백신 개발 지원 필요

최근에 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 분야의 신약 개발에 해당하는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제 등과 첨단 바이오 생명공학이 결합한 기능성 식품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접목 및 활용하여 인류를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 장병들의 식단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푸드 백신'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군 사기와 전투력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푸드 백신의 경우 음식을 통해 면역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없는 데다 다른 어떤 케미컬 백신보다도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군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배급 식단을 기능성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첨단 바이오산업을 방위산업(Defense Industry)과 결합한다는 개념으로, 이 방위산업의 영역은 크게 전차와 함정, 전투기 등을 개발해 획득·조달하는 무기체계에 해당하는 방위력개선사업과 일반적인 군 급식 및 피복, 일반장구류 등의 비무기체계에 해당하는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따라서, '첨단 바이오 방위산업'을 통해 군 장병들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품 개발부터 푸드 백신 이외에 맞춤형 헬스케어(Health Care)를 추가한 건강식 기능 식단 등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K-방산의 열풍에 힘입어 K-컬처와 K-푸드의 인기도 어우러져 '방산한류'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가운데, 장차 국산 첨단 바이오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개발된 기능성 건강식품이 해외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 맞춰 군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 인식 마련

장차 미래 국방환경은 단순히 신흥안보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출생률 저하로 병력 가용 인력 부족 현상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비전투 분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민간으로 외주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 속에 인구 절벽 시대라는 엄혹한 현실에 놓여 있는데, 전 세계에서 출산율 최저라는 오명으로 2070년대에는 인구가 1,700만 명가량 감소하여 약 3,000만 명대가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향후 병력자원 부족에 따라 군 급식 체계를 전면 민영화해 외주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단순히 군 급식 체계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장병들의 건강과 면역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첨단 기능성 군 식단을 개발함과 동시에 맞춤형 헬스케어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해 민간 전문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신흥안보 위협을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 국방 관련 첨단 군 식품 바이오 방위산업 및 장병 헬스케어 분야까지 확대하여 다각화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 지자체와 더불어 민-관-군-산-학-연 형태로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1세기 방위산업 = 신냉전 시대 국방력 집중 + 대규모 질병 감염의 신흥안보 위협 대비

바이오산업의 접근 → 국가 전략기술적 차원 접근 + 안보적 측면 고려

1 군 식품 바이오 방위산업

2 장병 헬스케어 분야

3 군 첨단 바이오산업 분야 인식 마련



朝鮮通信使 JOSEON TONGSINSA



조선통신사의 발걸음이 닿은 도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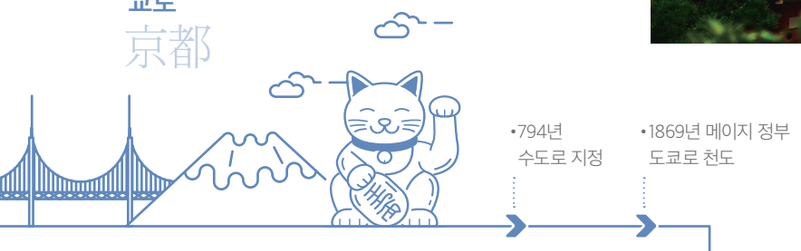
글·**이은영** 前 동경대학교 인문사회대학원 문화자원학 외국인연구생, 세계유산 활용 전략수립 연구원

조선시대 한양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에도, 지금의 도쿄에 이르기까지 왕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소모하여 조선과 일본을 오고 갔던 조선통신사. 초기의 통신사는 양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파견되었으나,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문화적으로 선진 문물 전달 창구로 주요 역할이 변하였다. 한양을 떠나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에 이르고, 다시 육로를 통해 에도까지.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은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일본 유학자와 문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문화 여정이었으며 그 영향이 에도시대의 사회와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한 조선통신사의 여정에서 주요 도시였던 교토, 그리고 종착지인 에도(도쿄)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르는 발전사를 통해 현대 일본 도시의 한 단면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과 역사 보존 도시

교토(京都)

교토(京都)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도(古都)로 794년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수도로 천도한 이후 근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에 천황(일왕)이 에도(현재의 도쿄)로 옮길 때까지 무려 천 년 동안 일본의 공식 수도였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거치며 도시에 많은 문화유산과 역사적 흔적을 남았으며, 그러한 교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변함없는 애향심과 역사 문화 보존의 도시로서의 면모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를 거쳐 꾸준히 성장한 교토는,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막부를 세우면서 일본의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교토에서 에도로 옮겨졌음에도 조선통신사 기록을 보면 오사카보다 번화했다는 내용이 있을 만큼 수도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869년 메이지 정부가 도쿄로 천도하면서 교토는 1,000년 이상 이어오던 수도로서의 지위는 사라지고 전통문화 도시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원자 폭탄 투하의 목표가 될뻔하였지만, 유서 깊은 고대 도시 파괴에 대한 반대로 투하 지역이 나가사키로 수정되어 교토는 피해를 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전통 주택이나 전쟁 이전의 건물들이 풍부하게 남은 일본에서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교토도 현대에 들어서 철도와 높은 콘크리트 건물, 복합단지와 새로운 건축물들이 들어서며 본연의 전통적인 모습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에 도시계획과 국토개발에 의해 역사적 건물과 유적,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포함한 역사적 풍토의 파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여 1966년 『고도의 역사적 풍토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토를 포함한 나라, 가마쿠라 등과 같은 고도(古都)의 역사적 풍토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토시는 1991년 '교토시 토지이용 및 경관대책에 관한 마치즈쿠리 심의회'를 설치하여 '보전·재생·창조'라는 3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게 교토의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교토의 특색을 살린 역사적인 도시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도심부의 교토마치야(京町家) 보존과 지역 재생에 거주 주민, 시민활동단체와 전문가, 기업을 포함하는 폭넓은 시민의 참여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구축하고, 교토시 도심부에서의 인구 회복, 고령화 대책, 커뮤니티 재생을 통한 도심활성화 등 지역 도시 경관의 변화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었다. 이렇게 교토시는 다양한 법률, 조례, 행정지도를 통해 전통문화 유지와 역사적 도심부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특히 마치야(京町家)를 재생한 상업시설이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역사 도시에 어울리는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토(京都)의 중심부는 역사적·문화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토 시민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상업활동을 유지하면서 거주하려면 고층 건물로 개축하거나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이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교토의 현재 모습은, 역사적 도심부의 도시관리 및 계획적 접근에 시민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이 주민 중심적 도시 관리의 기본이며 나라의 행정과 재정이 이 흐름에 어떻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1)]

1) 안인향·하성규, 2007, "역사적 도심부의 보전·재생·창조를 통한 도시만들기:일본 교토시(京都市)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54권, pp 45-63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도쿄(東京)

현재 일본의 정치와 경제, 사회 중심지인 도쿄도(東京都)는 도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매력적인 거점을 형성하고자 국가지원과 다양한 우대정책을 강력하게 제공하여 도쿄 자체의 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있다. 도쿄는 과거 강의 퇴적물이 쌓여 생긴 충적 평야가 넓어지면서 생긴 갯벌과 습지가 많아 사람이 살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에도(江戸)라 불렸던 도쿄에 에도 막부를 세우고 적극적인 간척사업으로 도시를 만들고 상업을 발전시키면서 에도 막부의 중심지이자 핵심 도시로 성장한다. 이후 메이지유신이 시행되면서 '동쪽의 수도'라는 의미에서 도쿄(東京)로 개칭하고 일왕이 교토를 떠나 도쿄로 옮긴 후, 일본 근대화의 중심축이 되어 20세기에 들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역도시로 성장한다. 그렇게 에도 막부의 중심지에서 근대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던 도쿄는, 1923년 관동대지진과 대지진으로 일어난 대화재로 도시 건물들이 크게 손실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의 대공습 폭격으로 다시 도시가 파괴되었다. 때문에 현재의 도쿄는 과거 '에도'라고 불리던 시기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대다수가 전후 복구되고 현대에 이르러 경제 부흥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세기에 두 번의 대재해를 겪었으나 세계 주요 경제 도시로 성장한 도쿄는 현재 국가 경제의 장기 불황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 도시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 붕괴 등 사회 전반의 급변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이는 일본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1년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하고 이듬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공표·시행하면서 정부 주도의 도시재개발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거점의 형성과 국제적인 중추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설정한 「도쿄의 새로운 도시 만들기 비전」을 제시하여, 국제금융 거점을 비롯한 국제 비즈니스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과 함께 민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기존 시가지 정비와 도심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쿄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 하네다 공항을 재확장하여 공항의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교통 인프라 정비를 통해 광역 교통과 국제물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컨퍼런스·컨벤션, 거주, 엔터테인먼트, 관광, 쇼핑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통합된 기능 복합형 신도심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2] 이처럼 도쿄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과 도시계획관리 정책을 통해 나라 재정을 투입하여 도시 인프라 시설과 주거 환경의 정비, 안전보장 및 방재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연계와 협력 플랫폼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의 보존과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토, 현대 일본의 미래지향적 도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도쿄, 조선통신사가 지나온 교토와 도쿄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주요 도시로서 일본 도시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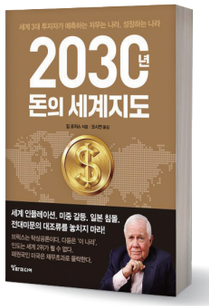
조선통신사의 발걸음이 지나온
교토와 도쿄의 발전사는
일본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며
현대 일본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2) 최민욱·김오석·김걸, 2018, "일본 도쿄도의 도시재생 정책과 시사점:특정·도시재생 긴급정비 지역의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1권 1호

세상 속에서 우뚝 서기 위해 필요한 것

개인의 시대라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만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기초 체력 쌓기와 올바른 이정표일 것이다.



「2030년 돈의 세계지도」

짐 로저스 지음 | 알파미디어

이 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향후 10년
성장하는 나라와 침몰하는 나라

전설적인 투자자로 손꼽히는 짐 로저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배경을 바탕으로 긴 흐름 속에서 역사를 통해 미래의 동향을 파악하여 세계 경제와 돈의 흐름을 읽는 투자 혜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안목을 바탕으로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등 큰 혼란 속에 놓인 현재의 세계정세 속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그는 향후 10년 간 각 나라의 성장과 쇠락을 예측하며 무조건 저가 상품이나 싼 주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파악해 장래성을 예측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결국, 세상의 흐름과 정세를 읽는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만이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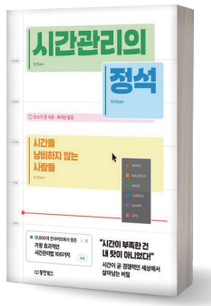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짐 로저스가 제시하는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

1. 매력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가
2. 이노베이터가 존재하는가
3. 기술혁신이 일어났는가
4.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하는가

"위기는 관점을 바꾸면 다시 없을 기회다"



「시간관리의 정석」

오스기 준 지음 | 동양북스

이 책은?

나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유한한 시간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시간관리법

바쁜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가졌을 의문이 있다. "왜 매일 바쁠까?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하지?" 이 책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다면화된 인간관계로 예측 불가인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것이 내 탓이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주변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만 익히면 여유가 생긴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과 삶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통해 행복을 실현하는 것임을 저자는 역설한다.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어 일의 기본과 삶의 균형, 마인드셋, 커리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의 핵심 보감

寶鑑

유일한 존재로서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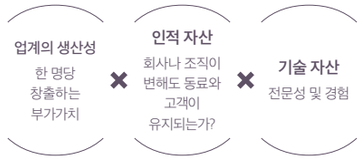
1. 크레딧 삼각형 이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나만의 전문성을 키워 백만 명 중 '유일한 1명'이 되어야 한다.

① 20대에 첫 번째 커리어를 1만 시간(5~10년) 단련하여 프로 전문가 기반 만들어 1/100의 존재되기
② 30대에 이직을 통해 두 번째 커리어를 1만 시간 만들고, 첫 번째 커리어와 합쳐서 1/10,000의 존재되기
③ 40~50대에 세 번째 커리어로 최대한 높은 정점으로 뛰어올라 1/1,000,000의 존재되기

2. 시장가치 측정법

회사안에서만 통용되는 조직인이 아닌, 전문성을 높이는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재정정보공개플랫폼

나라살림을 한 눈에!

열린재정

https://openfiscaldata.go.kr



열린재정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재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열린재정 포털은 예산, 결산 등 주요 재정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및 재정관련 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

한곳에서 살펴보는 다양한 재정자료

알기 쉬운 재정

국가재정에 관심 있는 국민을 위해
재정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 제공합니다.

재정통계

국가재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재정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함께하는 재정

내가 받을 수혜 정보 찾기, 정부 발주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전문 재정연구 분석자료 제공

재정 관련 전문가를 위한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국·내외 재정 관련 자료

재정 관련 법령, 국내·외 재정 관련 보고서 등
재정 관련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정보



일반 국민

재정운용구조,
주요 재정총량지표 등



연구자

조사분석용 세부통계정보 및
각종보고서 등



맞춤형

내가 받을 서비스,
내가 만든 예산, 내가 참여하는
정부 발주사업 등

열린재정은 맞춤형 데이터 가공 요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구목적 또는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재정 데이터를 이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입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주제별 재정 데이터

재정통계

국민들이 재정 관련 데이터를
활용·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예산 · 집행 · 결산 · 성과평가
국세통계 · 국가채무 · 재정수지 ·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국민관심재정정보

관심도가 높은 주요 주제별 테마를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정보로
알기 쉽게 제공

빅데이터로 보는 재정 · 예산특징 · 생활 · 복지 · 일자리
건강 · 안전 · 경제 · 환경

집행실적과 재정사업 설명자료

월별, 일별 집행실적과 세부사업별 사업목적·예산규모 등 설명자료 제공

FIS NEWS



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은 2월 13일(목),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행안부가 데이터기반행정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에서 10개 지표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재정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가 우수사례로 인정돼 주목받았다.

박용주 원장은 “데이터 기반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재정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재정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IS NEWS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월 10일(월)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24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9조 원, 총세출은 529.5조 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5조 원에서 이월액 4.5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 원으로 확정되었다.

김윤상 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4%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항상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찾아라~ 한국재정정보원 숨은 정보!

Quiz

국고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무엇일까요?

① e세상도움 ② e브레인 ③ e나라도움 ④ e열린나라



힌트

우측 QR코드로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답을 찾아보세요.

응모

좌측 QR코드로 접속해
정답을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2025.2.25. ~ 3.16.



지난호 정답 : 열린재정

지난호 퀴즈 당첨자

010-****-*519 010-****-*422 010-****-*494
010-****-*443 010-****-*124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월간 『나라재정』에
숨겨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애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
함께해요!



찾아라! 올겨울 최고의 센스는?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온도주의

PROUD MEMBER OF ENERGY SENSE CAMPAIGN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FIS 한국재정정보원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110, 서울시티타워
Tel 02-6908-8200 Fax 02-2288-6200 www.fis.kr

ISSN 2508-8971